

# IT의 미래를 위한 선택과 집중\*



양용석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책비서관  
(yongseok.yang@assembly.go.kr)

지식정보화 시대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사회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지식과 정보를 생산, 소유, 활용하는 역량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부와 명예가 크게 달라진다. 때문에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세계 각국은 선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각기 다른 속도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선진 사회가 필수적인데, 특히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경제가 그것이 속한 사회의 산물이고, 사회의 주요 제도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다. 세계 어디서나 봉건 시대의 제도들은 산업 발전을 가로막았고, 산업 시대의 관료주의는 지식 기반 시스템의 발전을 방해했다. 미국의 현실 역시 크게 다르지 않는데, 앨빈 토플러는 최근 저서 “부의 미래”에서 오늘날 미국의 주요 제도의 변화 속도를 자동차 속도에 비유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기업은 시속 100마일, 가족은 시속 60마일, 정부는 시속 25마일의 속도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정보통신 환경에서 정부의 속도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넘어선 정부조직 개편안이라는 강력한 엔진의 장착으로 과속(過速)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기고문은 정보통신부 개편방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기구개편에 대한 동향을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IT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제언하고자 한다.

## 정보통신부 개편방안의 문제점

정보통신부는 1884년 개화의 상징인 우정국으로 출발한 이래, 체신부를 거쳐 지난 1994년 현 체제로 개편, 지난 120여년 동안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정보통신부 개편 이래 정보화의 물결에 적절히 대응해 IT산업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으로의 면모를 정립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졌던 관련 기능을 하나로 모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이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T산업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 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선순환 발전하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최근 호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IT 관련 정부기능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해서 성공한 IT 정책기능 일원화라는 시스템이 경쟁국들의 모델 케이스가 된 것이라는 중요한 함의(含意)가 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방송·통신계에서 이뤄진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방송통신 관련 정책기능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돼 왔던 것도 이런 배경에 근거하고 있다.

## IT·방송·통신 통합은 시대적 흐름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구상하는 정부조직의 개편방향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 우선, 방송정책(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과 통신정책(산업자원부)이 분산될 경우, 정책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하게 된다. 또한 각 부처로 분리된 방송통신 기능을 다시 일원화시키는 것은 사후적으로 어렵고, 방송위원회와의 방송통신 기구통

합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IT·방송통신·미디어 고유의 '네트워크·서비스·기기·콘텐츠'라는 연결고리가 단절돼 정책추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불가능하다. 일반 전통산업 육성에 떠밀려 발전 속도가 빠른 IT·방송통신 산업의 수요(규제정책)와 공급(지원정책)의 유기적 연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셋째, 방송통신·미디어의 정책기능을 통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다수 부처로 분산시킴으로써 효율성이 현재보다 악화될 수 있다. 넷째, 호주(브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제부), 일본(정보통신성 신설 구상), 중국(통합위원회 신설 구상) 등의 국가에서 방송통신 관련 기구를 통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배치된다.

즉, 정보통신부의 기능분리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성장 동력 창출도 어려워지며, 방송통신 융합에도 역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의 존폐 여부를 떠나 최소한 IT·방송통신은 하나의 통합된 부처에서 담당해야 하며, 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와 논의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해외의 방송통신 기구통합 동향

### 중국

중국 정부는 IT 및 통신(Telecom)과 방송(Broadcasting)을 총괄하는 '커뮤니케이션 감독위원회'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 기존 IT·통신 담당부처인 정보산업부(MII)와 방송 담당부처인 광전총국(SARFT), 정보화 전담부처인 정보화판공청을 통합하려는 것이다. 특히 효과적인 방송통신 융합 대응을 위해 인터넷·통신·방송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3網 1체' 체제 실현 요구가 지속돼 왔으며, 최근 중국의 大部制 추진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통합기구 출범이 공식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방송통신 융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기구통합 추진방향을 예의 주시 중에 있다.



▲ 중국 IT·방송·통신 기구통합 추진방향(출처 : 정보통신부 국회 제출자료, 논자 재구성, 2008)

## 호주

호주는 지난 2007년 12월 기존의 '통신정보기술예술부(DCITA)'를 '브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제부(DBCDE)'로 개편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방송 및 정보기술 국가를 구현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경제적 기회 창출을 목표로 내건 것이다.

브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제부는 기존의 통신정보기술예술부가 수행하던 대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전화, 인터넷, ICT 서비스 등 통신시장 활성화 및 IT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조성, 정책수립, 법령제·개정, 통계관리, 온라인 정보보호 등의 업무와 미디어·방송·온라인 콘텐츠 분야 정책수립, 법령제·개정, 연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업무 및 우편산업 관련 정책수립 및 규제, 호주의 우편 역사 및 행정에 관한 정보 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다.

반면, 부처 내 예술 관련 기능은 에너지·수자원·문화재·예술부(Department of Energy, Water, Heritage, and Arts)로, 체육 관련 기능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로 이관됐다.

## 일본

일본은 지난 2001년 1월 정부조직 개편에서 우정성을 해체하고 기능을 재배분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정보화 추진에 대한 정책총괄과 조정기능은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위원장:수상)'로, 방송통신정책 총괄·정보통신서비스·우정사업은 '총무성'으로 이관한 바 있다. 총무성으로의 이관 이후 방송과 통신은 분리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NHK 개혁 등 융합시대에 대응한 방송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기 관련 정책의 경우, 경제산업성으로 각각 이관됐다.

문제는 부처간 정책갈등으로 IT·정보통신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으며,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정책기능 취약으로 새로운 정보화정책 제시에 실패했고, 총무성은 본래 기능(인력관리, 지사체관리 등)과의 이질성 및 총무성 내 IT 정책 수행의 후순위화로 정보통신서비스 정책추진의 미진화로 귀결됐다. 또한, 방송·통신 등 디지털 융합 추세에 역행한 조직분리(총무성과 경제산업성)로 방송통신산업 정책 추진이 부처간 마찰로 지연됐으며, 이로 인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한국에 뒤처지는 등 IT 선진국에서 탈락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시 총무성(통신·방송), 경제산업성(산업), 문부과학성(콘텐츠·지적재산권), 내각부(IT전략) 등을 통합한 정보통신성 창설구상을 지난 2007년 1월 발표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해외 각국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 조직개편 방안과는 반대로 통합하는 것이 트렌드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기능분리를 통해 도출된 역기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래지향적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바로 IT와 방송·통신 영역 통합부처의 존속에 따른 것이다. 종합해 보면 방송, 통신,

정보, 문화, 산업 등 정보통신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선순환적인 연결고리인 만큼 반드시 통합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IT 미래 위한 진정한 해법

필자는 새로운 정부의 구상에 나쁜 의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나온 것임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다만, 그 속에는 무지(無知)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무자년(戊子年).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총선을 비롯해서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해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길로 전진하기 위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부처들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부처들간 나눠먹기식의 혈투(血鬪)로, 집단 이기주의의 온상(溫床)으로, 무사안일의 행태(行態)로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화합과 통합의 미래로 가는 길은 과속(過速)이 아닌 가속(加速)의 해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IT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다각도의 측면에서 심사숙고(深思熟考)하고, 그 결과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진척될지,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완성해 나가야 할 지 냉정하게 사고하고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부의 미래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S**